



# 주간 통일정세

2013-12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가. 정치

- **北, 지난해 무역·세관법 개정…내각 권한 확대(3/18,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무역과 세관 분야에서 내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1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부문 법규집'(2012년 11월 발행)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4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무역법, 세관법, 출입국법을 각각 개정함.
  - 우선 무역법과 세관법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임.
  
- **北 10년 만에 경공업대회…김정은 "경공업에 역량집중"(종합)(3/1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0년 만에 평양에서 개최된 전국 경공업대회에 직접 참석해 육성연설을 통해 경공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연설에서 "사회주의 낙원을 만들려면 농업 전선과 함께 경공업 전선에 힘을 집중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며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속에서도 당 중앙은 전국 경공업대회를 열도록 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무인타격기·대공미사일 발사 훈련 지도(종합)(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일 항공군과 포병부대 훈련 현장을 찾아 무인타격기 공습과 대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초정밀 무인타격기의 대상물 타격과 저공으로 래습하는 적 순항미사일(미사일)을 소멸하는 자행고사로켓(지대공미사일) 사격훈련을 지도하였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장거리를 비행해 목표를 정확히 타격한 초정밀 무인타격기에 대해 속도가 빠르며 목표식별능력도 대단히 높다고 평가했다고 통신이 전함.



- **北, 내달 1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대외 메시지 주목(종합)(3/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내달 1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대의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알리는 공시를 발표하고 이달 30~31일 대의원 등록을 하도록 함.
  - 김일성 시대 이후 북한은 통상 매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국가의 예·결산을 비롯해 조직개편,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해왔다. 4월 열리는 회의는 우리 정기국회에 해당함.
  
- **北노동신문 "군민대단결로 승리하자"...주민결속 독려(3/22, 노동신문)**

  - 북한은 22일 내부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를 통해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총폭발시켜야 한다"며 주민 결속을 독려했다고 전함.
  - 노동신문은 이날 '군민대단결로 최후승리를 이룩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사와 다름없는 초간장 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당과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친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역사적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침략책동의 초점과 공격의 화살을 해당 나라의 지도부를 와해시키는 데 돌려왔다"며 '군민대단결'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결사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전쟁 위협 속 김일성 생일 준비도 '척척'(3/22,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연일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1번째 생일(태양절·4월15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생일맞이 준비에도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주석의 생일을 경축하는 국제준비위원회가 지난 1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결성됐고 관련 결정서가 발표됐다고 보도함.
  - 국제준비위는 결정서에 따라 '태양절'을 즈음해 집회, 사진·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 등을 조직하고 출판물이나 보도매체를 통한 선전활동을 전개함.
  
- **北 김정은, 인민군 11군단 관하 특수부대 시찰(종합)(3/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2일 '오중흡7연대' 칭호를 받은 인민군 제1973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께서 이 부대를 중시했고 나도 제일 중시하는 부대, 당이 믿는 부대"라며 "오늘 이 부대를 시찰한 데는 깊은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그는 '적 지역 지형사관'과 부대 작전계획을 보면서 부대장으로부터 부



대의 작전 전투임무 수행과 훈련실태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부대 앞에는 적의 아성을 타고 앉아야 할 중요한 임무가 맡겨져있다"라며 "일단 싸움이 터지면 적의 심장부에 벼락같이 돌입해 많은 군사대상물과 괴뢰 반동통치기관을 불이 번쩍 나게 타격·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김정은, 후방교란 임무 특수부대 이틀 연속 시찰(종합(3/24,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2일 인민군 제1973군부대 지휘부를 방문한 데 이어 23일에는 이 부대 산하 2대대를 잇달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어제 군부대(1973부대) 지휘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영도사적만 보아도 부대에 대한 관심이 특별했고 중요시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함.

■ **김정은동향**

- 3/19, 김정은 黨 제1비서, 3.19 전국 경공업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3.19,중통·중방·평방)
    - 최영림, 김경희, 김기남, 문경덕, 로두철, 박봉주, 리무영 등 참가
  - 3/20, 김정은 黨 제1비서, 3.20 초청밀 무인타격기의 대상물 타격과 敵 순항미사일을 소멸하는 자행고사로켓(지대공미사일) 사격훈련 지도(3.20,중통·중방)
    - 최룡해, 리병철, 박정천, 손청남 동행 및 항공·반항공군·포병부대 지휘관들 마중
  - 3/22, 김정은 黨 제1비서, 3.22 제1973군부대 지휘부 시찰(3.23,중통)
    - 최룡해, 황병서, 박정천 동행
    - 김정은, 3.22 세포등판개건공사장에 '선물' 전달(3.22,중통)
  - 3/23, 김정은 黨 제1비서, 3.23 제197군부대 관하 2대대 시찰(3.24,중통·중·평방)
    - 최룡해, 현영철, 김격식, 황병서, 손철주 동행 및 제630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이 영접
  - 3/23,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국 학생소년들의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 참가자들에게 선물 전달(3.23,중통)
    - 리영수(黨 부장), 전용남(청년동맹위원장) 등 참가 下 현지에서 전달모임 진행
  - 3/24, 김정은 黨 제1비서, 3.24 인민군대 여러 부문사업 지도(3.25,중통·중·평방)
    - 최룡해, 현영철, 김격식, 김경옥, 럽철성 등 동행
    - 김정은, 3.24 조선인민군 제1501군부대와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조하고 있는 식당배 '대동강'호도 시찰(3.25,중통·중·평방)
- ※ 수행 간부 未언급



#### ■ 기타 (대내 정치)

- 전국경공업대회, 3.18 평양에서 진행 및 김정은 黨 제1비서 연설 (3.19, 중통 · 중방 · 평방)
  - 최영림(보고) · 김경희 · 김기남 · 문경덕 · 로두철 · 태종수 및 당의 경공업관철에 앞장선 단위 일꾼들 · 노력혁신자들 · 중앙과 지방의 책임일꾼 등 참석
  - 김정은은 연설에서 '경공업전선은 농업전선과 함께 현시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화력을 집중해야 할 주타격 방향임.'
  - 그런데 '지금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 데 대한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며,
  - 이의 심각한 문제로 '△원료 · 자재의 수입의존, △일꾼들의 사업부진에 대한 패배주의 및 수입병(돈벌 생각 우선), △오분열도식 일본새' 등으로

#### 나. 군사

##### ● 北, 무인타격기 실전배치 첫 공개(3/20, 조선중앙방송)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항공군과 포병부대 훈련 현장을 찾아 무인타격기와 대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보도함.
- 북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바퀴 달린 3대의 견인 차량에 각각 실린 3대의 무인타격기 모습이 드러났으며, 지난 2011년부터 북측이 무인타격기를 개발 중이라는 첩보가 군과 정보 당국에 입수됐지만 실전 배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임.

##### ● 北, 공습경보 발령...1시간 동안 민방공 훈련(종합2보)(3/21, 연합뉴스)

- 북한군 최전방 부대에서 탈영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2일 "최근 몇 달 사이 최전방 북한군 부대의 탈영자 규모를 추적한 결과 예년과 비교하면 7~8배나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군과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군 최전방 부대는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해 부대별로 훈련하면서 탈영자 색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함.

##### ● 北, 공습경보 발령 1시간만에 해제(3/21,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내용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은 21일 9시 30분께 "전체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공습경보입니다"라며 "각급 부대들과 단위들에서는 적의 공중타격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하겠습니다"라고 전함.



- 이 방송은 공습경보를 발령하면서 "조선인민군방송입니다"라고 밝혀 군 방송 내용을 대내용 라디오를 통해 전한 것으로 보임.

#### 다. 사회·문화

- **北 산림면적 20년 사이 31% 감소(3/19, 연합뉴스; 유엔보고서)**
  - 북한의 산림 면적이 20년 사이에 31%나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유엔개발계획(UNDP)은 지난 15일 발표한 '2013 인간개발지수'(HDI) 보고서에서 북한을 종합순위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산림 면적 감소율과 유무선 전화 가입자 비율 등 일부 통계를 공개함.
  -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산림 면적은 1990년에 비해 2010년 현재 30.9%가 감소했고 2011년 현재 북한의 동식물 가운데 멸종위기에 처한 종은 8.6%에 달함.
- **北 "올 봄철 식수기간에 6억6천만 그루 심을 것"(3/20, 연합뉴스)**
  - 북한은 올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기간에 총 6억 6천40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관계자가 2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국토환경보호성 전철수 부국장은 이날 조선중앙방송과 인터뷰에서 "저지대에서는 3~4월, 고지대에서는 4~5월 나무심기와 종자파종을 비롯한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자체 실정에 맞게 30일씩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함.
  - 전 부국장은 이번 국토관리총동원사업 기간에는 '세포등판'(강원도 일대 대지) 방풍림 조성과 맨땅이 드러난 곳에 잔디 입히기, 비좁은 도로 개선사업, 평양시 원림녹화사업, 해안방조제 보강공사 등도 전개된다고 설명함.
- **북한 엘리트들, 사치품 구입에 '문제 없네'(3/20, 연합뉴스)**
  - 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엘리트들은 중국에서 최신형 카메라나 평면TV 등 사치품 구입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인근 상점들은 북한 주민들이 평양행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냉장고나 세탁기를 구입하는 등 쇼핑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힘.
  -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하면서 사치품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런 물품은 수출 금지 대상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베이징에서 북한 엘리트들의 쇼핑 열기를 보면 이번 유엔 대북제재에 전혀 위축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임.



## 2. 대외관계

### 가. 일반

- **北매체, '불타는 백악관' 선전...실제는 의사당 사진(3/18,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TV)**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TV'가 18일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영상물을 내보내면서 미국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을 헛갈리는 실수를 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이 사이트는 미국을 겨냥한 '전쟁의 아성에 불벼락치리'라는 제목의 동영장에서 미국 의사당과 폭발 장면을 합성해 내보내면서 "백악관이 장거리 미사일의 조준경에 잡혔다. 전쟁의 아성이 원자탄의 타격권에 들었다"라는 자막을 함께 내보냄.
  
- **北, 라오스와 IT협력 강화 합의(3/22, 자유아시아방송(RFA); 비엔티안타임스)**
  - 북한이 라오스와 IT(정보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라오스 국영 비엔티안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정성찬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국가소프트웨어 산업총국 대표단은 최근 라오스를 공식 방문해 사곤 차른봉 라오스 과학기술부 차관과 만나 IT협력에 관한 합의문을 작성함.
  - 이번 합의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 개발과 사용에 관한 경험 공유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기준 확립·품질 검사·규정 마련 등에서의 정보·경험 교환 ▲공동 기술교육 추진 ▲대표단 교환 ▲학술잡지 공동발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北, 댐공사 지연으로 탄소배출권 사업 차질(3/22, 자유아시아방송)**
  - 청정에너지 개발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려던 북한의 계획이 수력발전소 공사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체코 전력회사인 토픽 에너지사(社)의 북한사업 책임자 미로 슬라브 블라젝 씨는 지난달 북한이 유엔에 신고한 친환경 시설물이 완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북하려 했다가 뒤늦게 계획을 취소함.
  - 그는 RFA 측에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 북한 측 담당자와 연결도 어려운 상태다. 공사가 진행 중인지, 중단됐는지도 알 수 없다"며 댐 공사가 하나라도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함.
  
- **北, 日아베 총리 발언 비난..."대결광신자"(3/23,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최근 북한에 '멸망'을 경고한 데 대해 '악다구니질'이라며 "반공화국



대결광신자로서의 정체를 또다시 드러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우리는 이미 전에 일본이 우리 혁명무력의 과녁 안에 들어 있으며 전쟁의 불이 튀긴다면 일본도 무사치 못할 것이라는 데 대해 경고했다"며 "멸망의 운명은 정치적 주견도 없이 미국에 맹종하면서 죽대 없이 놀아대는 일본에 차례질(돌아갈) 것"이라고 밝힘.

● **北매체 "美와 대화 필요성 느끼지 않아"(3/23, 민주조선)**

-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3일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조미관계는 이제와서 말로 할 때는 이미 지났으며 우리는 미국과 마주앉아 더이상 할 말도 없다"며 "미국과는 말이나 논리가 통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함.
- 논평은 "최근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저마끔 나서서 '미국은 북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느니 '보상이 있을수 없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해대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조선신보 "美의 투트랙 전략, 정세폭발 초래할 수도"(3/24,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4일 대북 압박과 대화 노력을 병행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 투트랙 전략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전쟁방지의 방도는 조미(북미) 대결사 청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에 대한 적의와 반감을 품은 미국의 '투트랙' 전략은 현재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는커녕 정세폭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선이 천명한 '정전협정의 완전 백지화'는 (한미) 합동군사연습 기간에만 적용되는 시한부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힘.



#### ■ 기타 (대외 일반)

- 중국 「全人代」 제12기 제1차 회의(3.5-17) 소식 및 中(신화통신)·러·美·日 통신·신문 등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3.17 보도(3.18, 평방·중통)
- 조선인민군 방송, 3.21 전체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공습경보(적의 공중타격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 발령(09:30)·해제(10:28) (3.21, 중방)
- 최영림 내각 총리, 黃北 수안군 임농복합경영방법도입 정형(산림토지에서 나무와 농작물, 약초 등을 결합 재배) 현지 요해(3.21, 중통·중방)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 3.16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축전(3.14, 국가 주석 피선)에 대한 '中-北 친선협조 관계발전 추동' 요지 답변(3.21, 중통·중방)
-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問答(3.14)을 3.18 유엔 「안보리」 공식 문건 'S/2013/162호'로 배포(3.21, 중통·중방)
  - 中 보도사·러·英·日 통신 등, 3.20 '김정은, 초정밀무인타격기의 대상물타격과 자행고사로켓 사격훈련 지도' 소식 보도(3.21, 중통)

#### 나. 6자회담(북핵)

##### ● 北 핵시설 20곳에 3천명 근무 추산(3/18,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는 20개의 핵시설이 존재하며 이들 시설에 약 3천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함.
- CRS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9개국의 핵무기 연구개발 조직'(Nuclear Weapons R&D Organizations in Nine Nations)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원자력공업총국 산하에 여러 개의 핵 관련 조직과 연구소, 연구센터, '동위원소응용위원회'와 '핵에너지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고 밝힘.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공업총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무적 총괄 기구로 플루토늄 시설로 알려진 영변 핵 연구소와 평양의 핵 에너지연구소도 지휘함.

##### ● 북한 "미국 '핵위협'이 핵무기 경쟁 부추길 것"(3/19, 연합뉴스)

- 북한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위협'이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북한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재래식 무기 규제조약 협상 첫날 최신 핵보유 국가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강력한" 위상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공세를 강화했음.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리동일 차석대사는 "최대 핵보유 국가(미국)의 핵 선제 타격 정책 지속이 결국에는 더 많은 핵보유 국가를 낳게 될 것임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함.



- **北** 외무성 "B-52 한반도 재출격시 군사적 대응"(종합)(3/20,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20일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재차 출격하면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는 전략폭격기 B-52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전략폭격기가 조선반도에 다시 출격한다면 적대세력들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때에 전략적 핵타격 수단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초강경 의지를 떠보려는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주장함.
  
- **北** 조평통 "핵전쟁 도발자들 자멸할 것"(3/20, 연합뉴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2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의 한국 방문을 비난하며 "핵전쟁 도발자들은 자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남조선을 행각(돌아다님)한 미 국방성 부장관 카터는 국방부 장관 김관진, 외교부 장관 윤병세를 만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모의를 벌였다"며 "미국은 괴뢰들을 무모한 북침도발로 부추겨댔다"고 비난함.
  - 대변인은 "미국은 지금까지 합동군사연습의 간판 밑에 남조선에 해마다 방대한 핵전쟁 장비를 끌어들이며 전쟁도발의 기회만을 노려왔다"며 "미국은 전략폭격기 'B-52'든 핵잠수함이든 우리의 조준타격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핵무기 개발 기술적 난제에 봉착**(3/22, 중국청년보)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기술적 난제 뿐만 아니라 도의적 위기에도 봉착했다고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가 22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이 핵폭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을 얻었지만 무기 제조의 각도에서 보면 핵무기 실전화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함.
  -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기관지인 중국청년보는 먼저 북한의 핵폭과 장치가 아직 소형화를 이룩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 **北** "유엔 인권결의는 정치협잡행위...전면 배격"(종합)(3/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협잡행위"라면서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2일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인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놀음에 중지부를 찍고 미국의 국가 주권 유린행위부터



문제시해야 한다"고 전함.

- 대변인은 "최근 우리와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연이어 참패를 당하고 궁지에 몰린 미국은 추종세력을 발동해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피우는 것으로 우리를 어찌 보려는 가소로운 짓을 한다"라며 "우리는 정치적 대결과 모략의 산물인 이번 인권결의를 전면 배격한다"고 강조함.

### 3. 대남동향

#### 가. 정치·군사

- **北 통전부·225국, 대남 사이버 선전선동 총력(3/20, 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당 통일선전부(통전부)와 225국 등 대남 공작기관에 전담부서를 두고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선전선동'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에는 대남 선전선동 수단으로 뼈라나 단파라디오 방송 등을 이용해왔지만 최근에는 우리의 인터넷을 '국가보안법의 해방구' 내지는 '일제 항일 투쟁시기의 총과 같은 무기'로 인식하면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北 외무성 "B-52 한반도 재출격시 군사적 대응"(종합)(3/20, 연합뉴스; 외무성)**
  - 북한 외무성은 20일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재차 출격하면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는 전략폭격기 B-52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전략폭격기가 조선반도에 다시 출격한다면 적대세력들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때에 전략적 핵타격 수단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초강경 의지를 떠보려는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주장함.
- **北, 美 B-52 · 핵잠수함에 반발... "핵공격으로 맞설 것"(3/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R)가 끝나는 21일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강한 핵 공격으로 맞설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1일 밝힘.
  -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의 핵잠수함과 B-52 전략폭격기가 한미군사훈련에 참가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의 노골적인 핵 공갈과 위협이 시작된 이상 우리(북한)도 그에 상응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앙통



신이 전함.

-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미국은 B-52가 이륙하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핵잠수함이 발진하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해군기지도 우리 정밀 타격 수단의 타격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 ● 北, 독수리훈련에도 반발... "극악한 도발" (종합)(3/23, 연합뉴스)

- 지난 21일 종료된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맹비난해온 북한이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한 극악한 도발이고 우리의 경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반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3일 서기국 보도에서 "이 세상에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처럼 수십만의 대병력과 핵탄과 실탄을 장비한 최신 핵전쟁수단을 총동원해 남의 문전에서 무려 두 달 동안이나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벌리는 그러한 실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함.
- 조평통은 "우리는 이미 미국과 괴뢰패당이 일으키는 새 전쟁 도발에 전면전쟁으로 대답해 나설 것이며 선제타격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며 "말로 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는 힘에는 힘으로, 정밀 타격에는 초정밀 타격으로, 핵에는 핵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라고 밝힘.

#### ● 北 "유엔 北인권결의 앞장선 새누리당 별초" 위협(3/24, 연합뉴스)

- 북한은 2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난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 시비는 곧 우리 제도와 존엄에 대한 도전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함.
- 담화는 "더우기 괴뢰정권이 바뀐후에 와서도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계속되고있을뿐 아니라 더욱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특별히 주목하면서 높은 적개심을 가지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의지들을 다지고 있다"고 밝힘.

#### ■ 기타 (대남)

- 南 언론의 '北 인터넷 사이트 접속장애 자작극설' 언급을 '북침도발을 위한 허황한 모략극, 對北 사이버공격이 사전각본에 따라 감행되었음을 반증해준다고 비난(3.20, 중통·민주조선/공화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남조선이 조작한 모략극)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MJ, CNN 인터뷰서 "美 전술핵 재반입해야">(3/18, 연합뉴스)
  - 새누리당 정몽준(MJ) 전 대표는 18일 미국의 뉴스전문채널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음.
  - 정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과 평화공존할 수 없으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음.
  - 특히 그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할 필요가 있다"며 전술핵 재반입이 북핵 폐기의 유용한 '카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음.
  - 그는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음. 정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은 CNN 인터넷서널 채널 등을 통해 방송된다고 정 전 대표 측이 전했다.
  
- < '北 핵시설 20곳에 3천명 근무 추산' >(美CRS)>(3/19, 연합뉴스)
  - 북한에는 20개의 핵시설이 존재하며 이들 시설에 약 3천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음. CRS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9개국의 핵무기 연구개발 조직'(Nuclear Weapons R&D Organizations in Nine Nations)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원자력공업총국 산하에 여러 개의 핵 관련 조직과 연구소, 연구센터, '동위원소응용위원회'와 '핵에너지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고 밝혔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공업총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무적 총괄 기구로 플루토늄 시설로 알려진 영변 핵 연구소와 평양의 핵 에너지연구소도 지휘. 영변 핵 연구소는 우리늄자원개발연구소, 핵물리연구소, 방사화학연구소, 핵 재료연구소, 핵 에너지 연구소, 동위원소이용연구소, 중성자물리연구소, 원자로설계연구소, 핵전자학연구소, 방사선방호연구소 등 10개 부서로 구성돼있음.
  -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존재하는 핵시설은 총 20개, 이들 시설에 약 3천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음. 북한의 핵시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변 핵시설로 여기에는 5메가와트(MW) 원자로, 플루토늄 재처리공장, 새로 건설된 가스 원심분리기 우리늄 농축 공



- 장, 건설이 중단된 열 출력 100메가와트 경수로 등이 포함
- 북한은 최소한 5개 우라늄 광산과 제련시설을 갖추고 있고 영변에서 생산한 플루토늄과 이곳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있는 핵무기를 보관하는 시설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 <미국 동아태차관보 대행, 동북아 3국 방문>(3/23,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의 조셉 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오는 24~28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윤 차관보 대행은 오는 24일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마중 양국 간 현안을 비롯해 지역, 국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 이어 오는 25일~27일 서울에서 박근혜 정부의 고위급 당국자들과 양자 및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동시에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 강화 방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조율. 그는 오는 27일 도쿄(東京)로 이동해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국 방문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28일 귀국함.
- 윤 차관보 대행은 이번 동북아 3국 방문 기간에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중국 역할론'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정부를 상대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됨.
- 그는 지난 21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대화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현 상태에서는 대화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음.
- 윤 차관보 대행은 한국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오는 5월로 예정된 박 대통령 방한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로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 등에서 근무했던 윤 차관보 대행은 최근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 미·북 관계

● <北 조평통 "핵전쟁 도발자들 자멸할 것">(3/20, 연합뉴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2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의 한국 방문을 비난하며 "핵전쟁 도발자들은 자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음.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남조선을 행각(돌아다님)한 미 국방성 장관 카터는 국방부 장관 김관진, 외교부 장관 윤병세를 만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모의를 벌였다"며 "미국은 괴뢰들을 무모한 북침도발로 부추겨댔다"고 비난했음.
- 대변인은 "미국은 지금까지 합동군사연습의 간판 밑에 남조선에 해마다 방대한 핵전쟁 장비를 끌어들이며 전쟁도발의 기회만을 노려왔다"며 "미국은 전략폭격기 'B-52'든 핵잠수함이든 우리의 조준 타격권에서 절



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변인은 "미국은 괴뢰들에게 그 무슨 '방위공약 제공'을 운운하기 전에 자기의 비참한 운명부터 걱정해야 할 것"이라며 "핵전쟁도발자, 침략자들은 제가 지른 핵 불바다 속에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카터 부장관과 김관진 장관의 면담 사실을 언급하며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재차 출격하면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 <미 하원 외교위 "대북 금융제재 · PSI 강화 추진">(3/21, 미국의소리)

-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20일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외부 자금 유입 차단에 초점을 맞춘 초당적 법안을 몇 주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은 수많은 불법 활동과 외국 은행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부 자금을 유입한다며, 법안은 지난 2005년 미 재무부가 시행한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식 금융 제재와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강화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 미 재무부가 북한의 100달러 위조 달러화 제조에 대응해 마카오에 소재한 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에 가한 금융제재는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것임.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은 BDA 금융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북 핵 협상에 복귀를 약속했지만 그 사이에도 이란과 시리아에 핵 기술을 이전하는 기만성을 보였다며, BDA식 제재가 계속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당시 보다 북한 정권에 훨씬 더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를 잃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김정은의 도발적인 행동들은 그의 판단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BDA식 금융제재를 기하고 마약과 미사일 부품 등 불법 화물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선박을 미국과 한국 등이 공해상에서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로이스 위원장은 말했다.
- 한편, 로이스 위원장은 대북 제재의 효과적 이행과 관련해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점차 잃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무기 경쟁이 촉발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 로이스 위원장은 중국이 김정은에게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말도록 요구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며, 중국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무모한 행동들이 누구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 <北, 美 B-52 · 핵잠수함에 반발... "핵공격으로 맞설 것">(3/21, 연합뉴스)

-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R)가 끝나는 21일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강한 핵 공격으로 맞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의 핵잠수함과 B-52 전략폭격기가 한미군사훈련에 참가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의 노골적인 핵 공갈과 위협이 시작된 이상 우리(북한)도 그에 상응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미국은 B-52가 이륙하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와 핵잠수함이 발진하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해군기지도 우리 정밀 타격 수단의 타격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도 전날 "우리는 전략폭격기 B-52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전략폭격기가 조선반도에 다시 출격한다면 적대 세력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미국 공군의 주력 폭격기인 B-52는 이달 8일과 19일 괌에서 출격해 한반도에서 훈련하고 다시 괌으로 복귀했으며,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인 사이엔(Cheyenne)은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하고 있음.

#### ● <미국 "비핵화 약속없이 북미대화 불가능">(3/22,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북미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확인했음.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대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윤 차관보 대행은 지난 2005년 북핵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북한은 당시 비핵화를 약속했고, 우리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일각에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현 상태에서는 대화에 나설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됨.
- 그는 또 최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 적은 없었다"면서 "다만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
- 이어 윤 차관보 대행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피신처를 찾는 사람들이나 피란민을 송환하는 일은 절대 벌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면서 이는 '국제의무 위반'이라고 규정
- 그는 이밖에 한미 동맹을 '세계 최고'라고 표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5월 미국 방문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4월 한국 방문 등으로 여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의 최근 도발 위협과 인권 침해 등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대책을 요구했음.
- 벤저민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은 국제 규정으로 미뤄 최악이고, 경제체제는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면서 "핵위협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의원은 일부 방송사와 금융사의 전산망 마비사



태를 "북한의 공격으로 여겨진다"고 지적. 공화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은 "북한의 김씨 일가는 지난 60년 이상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기본적인 자유를 무시하고, 20만 명을 강제수용소에 감금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北, 유엔 대북제재 거둬 비난... "제재로 얻을 것 없다">(3/22, 연합뉴스)

- 북한은 2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우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우리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대조선경제 제재로 얻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북 제재결의는)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발로로서 우리는 이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 통신은 미국이 지난 70년간 군사분야에서 주요공장설비, 주민생활에 필요한 물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거래를 제한·금지했고, 북한과 경제관계를 맺은 나라와 기업, 개인에게까지 압력을 가했다고 비난했음.
- 특히 '미국의 공화국 북반부에 끼친 피해조사위원회'라는 기구의 조사자료를 인용, 1945~2005년 공개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만도 피해액이 13조7천299억6천4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음. 또 "미국이 1994년 10월에 채택된 조미(북미) 기본합의문의 핵심사항인 경수로 건설과 중유 납입을 의도적으로 지연 파탄시킨 것으로 입은 손실액만도 1조1천650억 800만 달러나 된다"고 덧붙였다.
- 통신은 과거 나치 독일과 일본의 패망 사례도 거론하며 "시대를 다산 미 제국주의가 여기서 예외가 된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미 제국주의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과의 대결사에서 미국은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北, 독수리훈련에도 반발... "극악한 도발">(3/23, 연합뉴스)

- 지난 21일 종료된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맹비난해온 북한이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한 극악한 도발이고 우리의 경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반발했음.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3일 서기국 보도에서 "이 세상에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처럼 수십만의 대병력과 핵탄과 실탄을 장비한 최신 핵전쟁수단을 총동원해 남의 문전에서 무려 두 달 동안이나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벌리는 그러한 실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조평통은 "우리는 이미 미국과 괴뢰패당이 일으키는 새 전쟁 도발에 전면전쟁으로 대답해 나설 것이며 선제타격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며 "말로 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는 힘에는 힘으로, 정밀 타격에는 초정밀 타격으로, 핵에는 핵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라고 위협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독수리 연습이 4월 말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야외기동훈련에 특수작전훈련까지 배합된 이 전쟁연습은 전형적인 공격형의 실동훈련이라는데 '키 리졸브'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며 바로 여기에 보다 큰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1일 시작된 독수리 연습은 내달 30일까지 이어짐.
  - 또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대남·대미 위협을 비난하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우려 섞인 발언을 겨냥해 "불순한 제재압살 책동으로 빚어진 현 위기 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며 미국에 의해 '핵 대결 시대'가 도래했고 '외국적 후과(결과)'는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개인 필명 글을 통해 "조미(북미) 관계는 이제 와서 말로 할 때는 이미 지났으며 우리는 미국과 마주앉아 더 이상 할 말도 없다"며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 <미국 하원 '북한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또 추진>(3/23, 연합뉴스)
    - 미국 하원이 지난달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 북한의 뒤이은 조치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또 추진 중임.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리처드 해나(공화뉴욕) 하원의원은 지난 21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와 정전협정 폐기 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을 비난하는 결의안'(H.RES.134)을 발의했음.
    - 브라이언 히긴스(민주뉴욕)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음. 이들 양당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결의안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3차 핵실험, 6자회담 불인정 선언,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발언, 정전협정 폐기 무효화 조치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 행위와 주민과 인권에 대한 억압 사례를 열거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음.
    - 또 북한에 대해 국제 사회 안정을 해치는 공격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정전협정 등을 준수하라고 요구했음. 결의안은 아울러 미국 행정부가 전략적 동맹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했음.
    - 이와 함께 미국은 물론 모든 국가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북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하원은 앞서 지난달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에도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규탄 결의안을 찬성 412표, 반대 2표로 가결 처리한 바 있음.
  - <조선신보 "美의 투트랙 전략, 정세폭발 초래할 수도">(3/24, 연합뉴스)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4일 대북 압박과 대화 노력을 병행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 투트랙 전략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 신문은 '전쟁방지의 방도는 조미(북미) 대결사 청산'이란 제목의 기사



에서 "조선에 대한 적의와 반감을 품은 미국의 '투트랙' 전략은 현재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는커녕 정세폭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선이 천명한 '정전협정의 완전 백지화'는 (한미) 합동군사연습 기간에만 적용되는 시한부 조치가 아니다"라고 위협했음.

- 신문은 "조선이 '정전협정의 완전 백지화'를 천명하고 나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조건부 대화론'을 거론하고 있다"라며 "조선은 대화의 조건에 대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가 전제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음.
- 조선신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전방 섬방어대 시찰과 전 미국 프로농구(NBA) 선수 데니스 로드먼과의 만남을 '강온양면'의 메시지라고 설명하고 이번에 선포한 '전면대결전'은 근 70년간 지속되어온 조미 대결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과거에 열린 회담을 재개하려는 수준의 접근법으로써는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어 "전쟁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도는 조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전환과 관련한 신호를 어떻게 평양에 닿도록 하는가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의 북핵 폐기 원칙을 기초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저지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 '투트랙' 어프로치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 중·북 관계

##### ● <중국, 북한 식당 이례적 대대적 단속>(3/20, 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 식당들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들어갔음.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단속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대북 압박 조치들과 관계된 것으로 보임. 20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공안, 해관(세관),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 관계 기관은 최근 동북 3성과 베이징 등지를 중심으로 북한 식당 단속 활동에 나섰다.
- 당국은 불시 단속 형태로 북한 식당에 들이닥쳐 종업원 불법 체류 여부, 북한산 주류·담배 등의 수입 허가 여부, 북한산 비아그라 등 미인가 약품·건강식품 판매 상황 등을 점검했음. 아울러 당국은 북한 식당에서 판매되는 마오타이주를 비롯한 고급 중국술의 진품 여부도 꼼꼼히 따졌다. 북한 식당들은 그동안 운영비용을 낮춰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위규 적발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한국인이 비자 없이 미국, 일본 등 국가에서 일정 기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인은 비자 없이 중국에 단기간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 북한 식당들은 정식 고용 비자를 받지 않은 종업원들을 고국에서 데려다 쓰는 경우가 많았음.



- 아울러 정식 수입이 까다로운 주류 대부분은 북한과 평양을 오가는 국제 열차의 개인 수화물로 반입해왔음. 북한 식당에서 많이 팔리는 평양소주나 대동강맥주는 상당 물량이 이 같은 음성적 경로로 유입됐음. 또한 중국 식당에서 기념품으로 팔리는 비아그라를 비롯한 각종 약품과 건강식품은 대부분이 중국 당국의 정식 수입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것들임.
  - 중국의 북한 식당에 대한 대대적·조직적 단속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 조치. 예전에는 손님과 개별적 분쟁이나 중국 측 사업 파트너와 갈등이 번지는 과정에서 북한 식당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었음. 한 북한 식당 관계자는 "중국이 요즘 같은 단속에 나선 것은 처음 본다"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 <【시진핑, 김정은에 답신...】양국은 친근한 이웃나라>(3/21,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답전을 보내 북한과 중국이 '친선적인(친근한) 린방(隣邦·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음.
    -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음. 시 주석은 답전에서 김 제1위원장의 축전에 사의를 표하고 "중조(북한과 중국) 두 나라는 친선적인 린방"이라고 강조
    - 시 주석은 "새로운 정세 속에서 나는 당신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 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하고 두 나라의 번영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이어 "이 기회에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조선의 모든 사업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기를 바란다"며 "귀국(북한)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축원한다"고 덧붙였음.
  - <【중국, 2월 대북 원유 수출 중단<로이터>】>(3/21, 연합뉴스)
    - 중국이 지난달 북한에 원유 수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했음. 이 통신은 중국 해관(세관) 통계를 인용, 중국의 2월 대북 원유 수출 실적이 '0'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21일 오후 11시 현재 중국 해관 사이트는 2월 수출입 통계를 정식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았음. 해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 2월과 2011년 2월에도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지 않았음.
    - 일각에서는 보도대로 2월 원유 수출이 중단된 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그러나 작년과 재작년 같은 기간에도 원유 수출이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번 통계 수치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여전히 우세함. 북한과 중국 간 원유 거래는 라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송유관을 통해 이뤄지며, 점성이 높은 원유를 나르다 보면 불순물이 쌓여 송유관이 막히는 현상이 종종 나타남. 따라서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 차원에서 송유관 운영을



잠정 중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임.

- 게다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2월 12일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월 1~11일이 포함된 2월 전체 원유 수출 실적을 갖고 북한에 대한 압력과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옴.
- 로이터통신은 월간 기준으로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이 0을 기록한 것은 200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 일이라고 보도했다가 뒤늦게 작년과 재작년에도 같은 사례가 있다고 정정 기사를 내는 촌극을 빚었음. 로이터통신도 스스로 "이번 조치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징벌 성격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음. 중국은 2003년 이후 북한에 매년 50만t 이상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음. 중국은 작년 한 해 52만3천여t의 원유를 북한에 수출.
- 해관 통계에는 '수출로 잡히지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저리 장기 차관 등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무상 원조에 가까운 지원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 ● <중국 단둥, 북한산 수산물 정상 반입>(3/22, 연합뉴스)

-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한때 주춤했던 북한산 수산물의 중국 반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22일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북한산 수산물의 주요 수입 경로인 랴오닝성 단둥(丹東) 시내 수산물 시장에서는 북한에서 잡은 게, 조개 등의 수산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통신은 현지 상인들을 인용해 얼마 전부터 통관 검사가 강화되면서 북한에서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들여오지는 못하지만, 수요에 비해 충분한 물량이 반입되고 있다고 전했음.
- 단둥의 수산물 판매업자는 "중국 계는 1kg에 200위안(3만5천원)이지만 북한 계는 140위안(2만5천원)으로 값이 쌀 뿐만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 잡은 것이어서 살이 통통하고 맛도 좋다"고 설명했다.
-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북한 당국이 '전투동원태세'를 강조하면서 어선들의 출어가 급격히 줄어 두만강 유역의 지린성 훈춘(琿春) 등 일부 접경도시에서는 북한산 수산물 교역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음.
- 통신은 현재 북·중 간 경제무역 왕래가 예전과 다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양국을 오가는 인원과 화물이 출입국·통관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친 뒤 순조롭게 국경을 넘고 있다고 전했음.

#### 라. 일·북 관계

##### ● <북한 "일본도 핵선제공격 대상">(3/18, 미국의소리)

- 북한이 일본의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 검토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17일 북한이 정밀 핵타격 수단을 포함한 모든 공격 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일본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으짤하지 말라고 위협했음.



- 노동신문은 일본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대해 군사 대국화와 해외 평정의 야망 실현에 이용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하면서, 재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도 결코 공격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주장

● <일본, 핵 물자 실은 북한산 화물 몰수>(3/19, 미국의소리)

- 일본 정부가 핵 관련 물자를 실은 북한 화물에 대해 사실상 몰수 조치를 내렸음. 일본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쓰일 수 있는 알루미늄 합금 봉을 제3국에 수출하려던 것으로 보고 있음.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해 8월 도쿄항에 기항했던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에서 나온 화물을 조사한 결과 핵 관련 물자가 발견됐다고 발표. 이번에 확인된 물자는 알루미늄 합금 막대기 5개로, 북한이 중국 대륙을 거쳐 제3국에 수출하려던 것으로 밝혀졌음.
-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알루미늄 합금이 고강도 물질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제조에 쓰일 수 있다고 설명. 일본 정부는 세관당국을 통해 알루미늄 합금 막대기를 보관 중이던 민간업자에게 사실상 몰수 조치인 제출 명령을 내렸음.
-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가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이 법이 핵 관련 물자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이는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북한이 관여한 화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일본의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 이 법은 북한산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를 신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의 적재 화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北, 다이쇼 총리 발언 비난..."대결광신자">(3/23,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최근 북한에 '멸망'을 경고한 데 대해 '악다구니질'이라며 "반공화국 대결광신자로서의 정체를 또다시 드러냈다"고 주장
- 신문은 "우리는 이미 전에 일본이 우리 혁명무력의 과녁 안에 들어 있으며 전쟁의 불이 튀긴다면 일본도 무사치 못할 것이라는 데 대해 경고했다"며 "멸망의 운명은 정치적 주견도 없이 미국에 맹종하면서 쫓대 없이 놀아대는 일본에 차례질(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음.
- 또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수많은(매우 많은) 죄를 지은 일본이 감히 우리가 취하는 강력한 제2, 제3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놓고 횡설수설하는 데 대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단단히 계산해두고 있다"며 "멸망의 길로 줄달음치는 군국주의 일본이 낭떠러지를 피하려거든 당장 고삐를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밤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대로라면 북한은 틀림없이 멸망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한미 국방당국, 연방정부 지출삭감 영향 논의">(3/18,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한국 방문기간 '연방정부 자동 지출 삭감(시퀘스터:sequester)'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특히 한미 국방 당국은 시퀘스터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국방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평가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1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와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카터 부장관은 18일 방한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따른 양국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양국 국방 당국의 협의 의제에는 이와 함께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전격 발표한 알래스카 미사일 기지의 요격미사일 증강 배치 계획과 함께 시퀘스터 조치 및 이에 따른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rebalance) 전략' 변화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음.
- 미국 국방부는 최근 시퀘스터 조치로 국방비 감축이 불가피해지자 주한미군 가운데 현역 군인을 제외한 미국인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음.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국방비 감축을 이유로 이런 조치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을 조정할 것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카터 부장관의 이번 방한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점쳤음.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 40~45% 수준에서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카터 부장관은 이와 함께 이번 방한기간 양국 간 전작권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이른바 'CAISR'에 대한 한국 정부의 투자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전했다. CAISR은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등 군사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합한 군사용어로, 이는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이 확보해야 하는 필수 군사역량으로 꼽히고 있음.
- 한편, 카터 부장관은 방한 기간에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에 대해 논의한 뒤 훈련 현장을 직접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 <靑, 잇따라 주한미군 범죄 美측에 강력조치 촉구>(3/18, 연합뉴스)

- 청와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새 정부가 한반도 안보 위기 과정에서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잇따른 주한미군 범죄가 이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주한미군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미국 측과 함께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있다"면서 "미 측과 협의해 관련 대책을 좀 더 강하게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지난 17일 외교부 담당 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에 최근 빈발하는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해 우려를 전달한 것은 물론 보다 강력한 예방 조치를 취하라고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주한미군 3명이 비비탄 총을 쏘 시민을 위협하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수석에게 물어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관련 범죄는 이달에만 벌써 여러 건 발생했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미군 3명이 비비탄 총을 쏘 시민을 위협하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도심 난동' 사건이 발생. 16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한국인이 미군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다 흉기를 빼앗아 미군들을 찌르는 사건도 일어났다.
- 또 17일 오전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한 호프집에서 주한미군 E(19)일병이 화장실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문 모(28) 순경의 얼굴을 때리는 등 잇따른 주한미군의 범죄로 국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음.

● <美국방 부장관 "한국 방어위한 모든 전력 갖춰">(3/18,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18일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면서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지금이 한미동맹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카터 부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미 양국 국방부는 긴밀히 협조하면서 미국의 능력과 한국의 능력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연습하고 훈련을 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진가가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앞서 카터 부장관은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양국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카터 부장관은 이날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과 잇따라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음.

### ● <北 국지도발 때도 韓美 연합 전력으로 응징>(3/24, 연합뉴스)

-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2일 서명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의 국지도발 때 한미 연합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북한의 도발양상에 따라 도발원점은 물론이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작전개념이 한미가 공동 수립한 이 계획에 반영. 당초 미국은 지원·지휘세력까지 응징하는 작전개념에는 확전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다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불안이 커지자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 그해 12월 8일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서울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갖고 북한이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을 계속 감행할 것에 대비해 한미가 공동으로 국지도발 작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면전에 대비한 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이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국군의 작전계획은 있지만 한미가 공유하는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수립키로 한 것. 이에 따라 2011년에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주요 개념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고 지난해에는 주요 개념에 근거한 기본계획들이 작성됐음.
- 합참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작성된 내용에 대한 최종 정리와 보완이 이루어졌다"며 "정리과정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도 고려돼서 최종적으로 계획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당초 지원·지휘세력까지 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작전개념을 한미 공동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과도하게 보복공격을 하면 확전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우리측은 도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응징해야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전해졌음. 응징범위에 대한 한미 간의 온도차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행위를 계기로 좁혀졌고 결국 미국은 우리 군의 작전개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국지도발대비계획은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원칙하에 한미가 공동으로 평시 도발에 대비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유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계획에 대해 "북한의 평시 국지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최상의 조치다. 여기서는 분명



- 히 우리 대응은 자위권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밝혔음.
- 지금까지는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국군이 우선 대응하고 미군이 개입 여부와 관련해 우리측과 협의했으나 앞으로는 국지도발대비계획상의 절차에 따라 미군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됐다. 합참 관계자는 국지도발 때 미군의 지원 여부에 대해 "기존에는 미측의 판단으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게 됐다. 요청조건이 맞으면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음.
  - 미군 전력을 지원받는 절차는 합참과 주한미군 작전부서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북한의 도발 때 미군이 자동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을 비롯한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음.
  - 한미는 북한의 주요 국지도발 유형을 수십 가지로 정리하고 도발 유형에 따른 대비 계획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도발 유형에는 ▲군함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침투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도발 ▲저고도 공중침투 상황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국지적 충돌 ▲잠수함을 이용한 우리 함정 공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군의 한 소식통은 "주요 국지도발 유형을 수십 가지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국면을 정리했다"며 "우리 군이 가장 이른 시간에 강력하고도 정확하게 응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
  -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 계획에 서명한 직후 "북한이 실제로 도발했을 때 강력히 응징해 도발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며 "오늘 계획은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의 문서로서 결정하고 보장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음. 서면 사령관도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 자체가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계획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신속하게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한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 나. 한·중 관계

- <한-중 정상 통화 "북한, 대화 나오도록 협조">(3/21, 미국의소리)
  -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형 대변인이 전했다.
  - 박 대통령은 또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지만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 주석은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국익에도 도



움이 된다며 직접 당사자인 한국과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시 주석이 현 상황에서 다른 당사국들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정세가 완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박 대통령에게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서로 방문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방문 시기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두 나라 정상이 취임 축하 전화통화를 한 것은 한-중 수교 이래 21년 만에 처음.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는 양국 간 신뢰 증진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에 앞서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도 전날 오후 중국 왕이 외교부 신임 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40분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비핵화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中, 한국 해킹 사건과 관련해 "해킹은 공동의 문제다">(3/22, 인민일보)

- 2013년 3월 21일,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 "20일, 한국 방송국과 금융권이 해커공격을 당했다. 한국 관련 부처는 이번 인터넷 공격 가운데 중국의 IP주소를 사용한 해커도 있었다고 밝히며, 현재 근원지를 추적 중에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한 한국 측 조사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라는 기자의 질문에 홍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 홍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여러 차례 인터넷 해커공격은 글로벌 문제로 익명성, 국제성, 사기성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른 나라의 IP주소를 도용한 인터넷 공격 방법은 해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은 인터넷 해커공격과 인터넷 안보에 대한 대처는 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으로 평화, 안보, 개방, 협력적인 인터넷 공간을 수립해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상호존중,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각국들과 인터넷 공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 한·일 관계

● <‘대마도는 우리땅’...의정부의회, 정부·국회 대책 촉구>(3/22, 연합뉴스)

- 경기도 의정부시의회가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중앙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에는 즉각 반환을 요구. 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마도 실질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일본 규수와 147km 거리에 있지만 부산과는 불과 49.5km 떨어져 있음. 조선 성종 17년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을 비롯, 1786년 일본에서 제작된 삼국통람, 1855년 영국 지도, 1865년 미국 지도 등에는 한국 영토라는 기록이 있음.
-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대마도는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사실, 과학적 근거로 볼 때 우리 영토가 분명하다"며 "정부는 이를 정식으로 거론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영유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 규탄과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 현안을 폭넓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시의회는 일본 정부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대마도를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했음. 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외교통상부장관, 주한일본대사관 등에 전달하기로 했음.
- 한편, 경남 창원시의회는 지난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8주년 기념식을 열고 대마도 영유권을 재차 강조.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기 전인 2005년 3월 18일 옛 마산시의회는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라. 미·중 관계

- <코언 차관 "중국, 효과 있는 대북 제재 이행할 것">(3/22, 연합뉴스)
  -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22일 "중국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음. 코언 차관은 22일 베이징(北京) 현지에서 취재진에 "중국은 최근 북한에서 이뤄진 일(제3차 핵실험)이 중국에도 해를 끼칠뿐더러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음.
  - 코언 차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094호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려고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정책 조정관과 함께 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 중임. 프리드 조정관은 "해법의 한 주체인 중국이 협력적인 정신으로 미국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차단에 협력할 것으로 전망했음.
  - 두 인물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음. 지난 20일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의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규현 차관과 회담한 데 이어 21~22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대북 외교진용과 만났음. 이들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등과 만나 대북제재 결의 2094호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과 베이징 외교가에선 미국 측이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의 외국환 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 동참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미국은 조선무역은행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산업은행에 수백만 달러의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코언 차관의 아시아 순방 직전에 조선무역은행을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렸음. 그러나 미중 간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회담에서 중국 측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을 선언한 이후 외교부 차원에서 각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금융, 해운·항공 교통, 무역 등의 분야에서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 법규 준수를 강조, 아울러 공안기관을 동원해 북한의 현금 줄인 중국 내 북한 음식점에 대한 탈법 운영을 단속하는 등 '나름대로'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음. 코언 차관과 프리드 조정관은 중국 방문 후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 마. 미·일 관계

##### ● <미국일본, 북한 위협 공동 대처 확인>(3/18,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의 고위 국방 당국자는 17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문제를 협의하고 양국이 결속해 북한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로 확인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음.
- 국방부는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이날 방일해 도쿄도 요코다(横田) 미군기지에서 일본의 에토 아키노리(江渡聰徳) 방위성 부대신(차관)과 만나 북한 정세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서 양자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 카터 부장관은 북한 탄도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느는 것을 고려해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한 뒤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 중인 한국과 미국에 대해 도발적인 언동을 반복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하고 있음.
- 카터 부장관은 이날 에토 부대신에게 "미국의 일본 방위에 대한 약속이 확고하고 영구적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 카터 부장관과 에토 부대신은 "미·일 동맹이 일본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소개했음. 한편, 두 사람은 주일미군 재편성과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의 괄 이전에 관해서도 논의했음.

##### ● <일본 정부 '북한 조선무역은행 제재 검토'>(3/20, 미국의소리)

- 미국 재무부의 데이비드 코언 테라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19일 일본 고위 관리들과 만나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 코언 차관은 가네하라 노부카쓰 관방 부장관보와 야마자키 다쓰오 재무성 국제국장,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심의관 등을 잇달아 만나 대북 금융 제재 방안을 협의했음.
- 코언 차관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를 설명하고 일본 측의 협조를 요청.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반영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음. 특히,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일본도 미국과 같은 형태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일본 언론은 일본 국민과 금융기관들에 대해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가 곧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코언 차관이 한국과 중국 정부에도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음.
  -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주요 외국환 은행으로 지난 1959년 설립됐음. 미국 재무부는 지난 1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막기 위해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 재무부에 따르면 조선무역은행은 지난 2009년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과 관련해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에 중요한 금융 지원을 제공했음. 재무부는 또 조선무역은행이 수 백만 달러의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북한 제1의 무기 거래 조직인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와 금융 조직인 단천상업은행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지적
  - 재무부는 이 같은 불법 활동으로부터 미국 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에 따른 위험에 특히 주의할 것을 촉구했음.
- <미국 뉴저지주 하원 "일본, '위안부 범죄' 가르쳐라">(3/22, 연합뉴스)
- 미국 뉴저지주 하원이 21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에 '위안부 역사' 교육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채택. 뉴저지주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 20만 명의 고통과 희생을 기린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80명 중 75명이 출석했고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음.
  - 하원의 결의에서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용어는 1932~1945년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성노예'(sexual slavery)를 일컫는 일본 정부의 표현'이라고 전제하고 "이들 대부분은 한국과 중국인 여성들이지만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네덜란드 등지에서도 동원됐다"고 명시했음. 위안부가 단순히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유린 범죄임을 분명히 밝힌 것임.
  - 결의는 이어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인을 받아내려고 싸우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지하며, 일본 정부는 역사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과거의 범죄를 미래 세대에 교육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이번 결의안은 전체적으로는 2007년 연방 하원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뉴저지주 의회가 별도로 하고 싶을 말을 추가한 형식임. 하원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상원에 함께 발의된 결의안도 조만간 채택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뉴저지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타운과 카운티, 주의회 상하원 등 4대 입법기관 모두 위안부



- 결의안을 채택하는 첫 번째 주가 됨.
- 뉴저지주의 팰리세이즈파크(팰팍) 타운 의회에서는 2010년, 버겐 카운티 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음. 미국 주의회 차원에서 위안부 결의가 채택된 것은 1999년 캘리포니아주 하원과 지난 1월 뉴욕주 상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임. 뉴저지주 하원의 결의는 뉴욕주 상원의 결의보다 수위가 더욱 높아졌음.
  - 뉴욕주 상원은 '국제문제 불개입'의 주의회 규정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지한다,"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다" 등의 표현은 담지 못했음. 뉴저지주 의회는 지난해 5월 팰팍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를 철거하려는 일본 정부의 외교전이 노골화한 것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다시 이슈로 부상하자 이 결의를 추진하게 됐음.
  - 앞서 미국 연방 하원은 지난 2007년 7월30일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이고 분명한 시인과 사과, 역사적 책임 등을 요구하는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음.
  - 연방 하원은 최근에는 결의안 채택 이후 6년이 다 되도록 달라진 게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결의안을 강화한 '제2의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 중임.

#### 바. 미·러 관계

##### ● <“러시아-미국 6자회담 대표 한반도 정세 논의”>(3/21, 연합뉴스)

- 러시아와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조성된 한반도 정세를 집중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밝혔음. 외교부는 이날 언론 보도문을 통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 12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조성된 한반도 정세를 상세히 논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짙막한 보도문을 발표했을 뿐 구체적 회담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19일 모스크바에 도착해 20일 오전 모스크바 시내 외교부 관저에서 모르굴로프 차관과 회담했음.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클리퍼드 하트 미국 6자회담 특사와 러시아 측에서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6자회담 차석대사(북핵담당 특임대사)도 참석
-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북한의 정전협정 탈퇴 및 남북 불가침합의 파기 선언 등으로 최악의 긴장국면에 접어든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마이클 맥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러 양측의 회담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 맥폴 대사는 "워싱턴 대표단과 모르굴로프 차관, 로그비노프 대사 등이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 과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소개했음. 회담에서 대북 제재뿐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방안이 함께 논의됐음을 시사한 발언



- 맥폴 대사는 그러면서 "관련국들의 합의가 없으면 한반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며 "올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훌륭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러시아와 중국 등이 동참한 점을 평가한 것임.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모스크바 회담에 뒤이어 20~22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의회 지도자와 외무부 피터 프루겔 아시아태평양국장, 마이클 플러거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 정부 당국자들과 회동할 예정임.

## 사. 중·일 관계

### ● <일본, 프랑스 헬기장비 중국 판매에 '우려'(3/18, 연합뉴스)>

- 프랑스 기업이 중국에 최신예 헬기 착함(着艦)장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일본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 일본 정부는 이 장치가 센카쿠(중국어명: 다오위다오) 주변 영해를 침입하는 중국 선박에 장착될 것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으나, 프랑스 정부는 대중 무기수출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일본 측이 문제를 삼은 장비는 프랑스 방산기업인 DCNS가 만든 헬기 착함장치로, 악천후에도 선원들의 보조 없이도 갑판에 이착륙이 가능함. DCNS는 중국외에 한국, 대만, 유럽 등 20개국 이상에 이 장치를 공급하고 있음.
- 일본은 중국 측이 연내에 해양감시선 2척에 이 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구입했으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센카쿠주변 감시 범위가 넓어지는 등 중국의 해양활동이 강화돼 일본의 센카쿠 실효지배가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외교 경로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5~6월 개최를 목표로 조정중인 일본-프랑스 정상회담에 영향이 없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응을 요구했음.

### ● <"일본 아소 부총리, 내달 중국 방문 추진"(3/22, 연합뉴스)>

-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이 내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리커창(李克強) 총리와 회담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음. 실현되면 지난해 9월 일본의 센카쿠(중국어명 다오위다오) 열도 국유화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이후 최고위급 교류에 해당함.
- 아소 부총리는 중국을 방문하면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과 '중일 재무(재정)대화'를 개최할 전망이다. 중일 재무대화는 지난해 4월에 4차 회의를 열었음. 또 시 주석과 회담에선 북한의 3차 핵실험 제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길 원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중일 양국은 5월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 관계를 주요 의제로 삼아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됨. 앞서



양국은 대화의 신호를 주고받았음.

-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중일 관계는 아주 중요한 양국간 관계"라며 "개별 사안이 전체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대화를 시사했고, 중국도 시진핑-리커창 체제의 발족을 계기로 일본과 대화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왕이(王毅) 전 주일 대사를 신임 외교부장으로 임명.

#### 아. 중·러 관계

##### ● <시진핑 첫 순방 외교...러시아와 공조 강화>(3/22,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오전 전용기편으로 첫 외국 순방 길에 올랐음. 시 주석은 22~30일 러시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을 차례로 방문. 남아공 방문 기간에는 더반에서 열리는 제5차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 참석함. 시 총서기의 순방은 첫 방문국인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임.
- 역대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첫 해외 나들이는 집권기 외교 방향을 제시하는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져왔음.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도 2003년 5월 집권 후 첫 방문지를 러시아로 정하면서 러시아 중시 외교 방침을 천명. 시 총서기는 22~24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고 향후 중·러 협력 방침을 제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
- 시 총서기와 푸틴 대통령은 무역, 투자 등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지역 문제에서 더욱 철저한 공조 기반을 다져나가는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 아울러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무역, 에너지, 투자, 인적 교류,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협정에 서명할 계획임.
-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양국이 오랫동안 진척시키지 못한 천연가스 공급 계약 체결 여부. 중국과 러시아는 동시베리아와 중국 동북지역을 잇는 가스관을 건설, 연 380억m<sup>3</sup>의 가스를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가격을 둘러싼 이견 탓에 수년간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
- 청궈핑(程國平)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리는 이미 천연가스 공급 문제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시 주석의 방러 기간 협의서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시 주석은 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 위원장 등 각계 지도자도 만나는 등 러시아 지도자들과 폭넓은 접촉에 나설 예정임.
- 시 주석은 러시아 국방부 방문을 통해 중러 군사 협력에 관한 의지도 피력할 계획.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나서 시 주석은 아프리카로 이동, 대 아프리카 및 대 브릭스 외교에 나설 예정임. 시 주석은 아프리카 국가와 전통적인 우의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인프라 등 경제 건설 지원을 돕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자원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신식민주의가 아닌 상호 이익의 관계라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브릭스 정상회의 기간 시 주석은 신흥 국가들 간 연대를 강화해 국제 경제 시스템 안에서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의 발언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제안을 할 것으로 전망됨.

### ● <밀월 중·러, 영토주권 전략적 지지 강화>(3/23,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22일(현지시간)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상호 전략적 지지를 강화해나가기로 했음. 비슷한 시기 새로 임기를 시작한 중러 정상이 이 같은 의견일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러 공조가 한 차원 강화될 전망. 양국 정상은 정상 회담에서 사상 최고 수준에 오른 양국 관계에 대한 평가를 공유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날 중국-러시아 관계는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를 맞고 있다"며 "러시아를 방문한 주요 목적도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현재 양국 관계는 수세기에 걸친 양국 역사에서 가장 좋은 시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 공유를 바탕으로 양국은 앞으로 국제·지역 문제에서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다음 시기,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상호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서로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두 나라가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안보를 지켜나가자"고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도 동감을 표했다.
- 가장 주목할 대목은 양국이 사상 최고 수준의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확인하면서 미일 동맹에 대한 대응과 상호 영토주권에 대한 상호 지지에 합의한 부분임.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에 따라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소원 하던 미일 동맹의 부활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중러 양국이 전략적 대응에 나서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임.
- 영토주권에 대한 상호 지지도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놓고 일본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상호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임.
-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3일 "양국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세계전략에서 커다란 탄력적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중러의 긴밀한 협력은 서방과의 발전관계를 맺는데도 주체적인 운신 폭을 넓혀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어 "냉전 이후 국제관계는 전통적인 맹방 관계보다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에 맞서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를 함께 주도하는 중러 양국은 새로운 밀월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 핵, 이란 핵, 시리아·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지역 문제에서 공조 체제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커졌음.

- 양국 정상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스·석유 등 에너지 분야 협력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정치 협력 중심이던 기존의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음. 러시아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은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스관을 이용한 러시아 천연가스의 중국 수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수년째 진통을 거듭했던 천연가스 공급 문제가 타결됐음.
-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을 잇는 가스관을 새로 건설해 2018년부터 30년 동안 매년 380억 $m^3$ 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내용. 앞으로 양국의 협의에 따라서는 공급량이 600억 $m^3$ 까지 늘어날 수도 있음. 선박을 이용하지 않는 가스관 방식으로 중국에 대량의 천연가스가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음.
- 중국의 작년 천연가스 전체 수입량이 42억 5천만 $m^3$ 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량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음. 양국은 천연가스 공급 가격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였음. 중국 측은 1천 $m^3$ 당 250달러를 제시했지만 러시아는 300달러 이상을 요구
- 시 주석 도착 직전까지 크렘린 대변인이 "천연가스 내용은 서명 문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을 정도로 양국은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다가 양국 관계의 큰 틀을 고려해 막판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는 원유 거래량도 크게 늘리기로 합의했음. 러시아 석유기업 로스네프티와 CNPC도 이날 선급 조건부 원유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 현재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을 잇는 송유관을 통해 중국은 매년 전체 원유 수입량의 8%를 차지하는 1천 500만 $t$ 의 원유를 사들이고 있는데 이 양을 대폭 늘린 것임.
- 시베리아 아무르주 스코보디노에서 헤이룽장성의 석유 도시 다칭(大慶)을 잇는 1천 $km$  구간의 송유관은 최대 연간 3천만 $t$ 의 원유를 나를 수 있도록 지어졌음. 이 같은 에너지 협력 확대는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음.
- 에너지 소비·수입 대국인 중국으로서는 안정적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됐고, 대표적인 석유·가스 수출국인 러시아는 유럽 편중의 수출 구조에 변화를 꾀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환구시보는 전했다.

## 자. 기. 타

###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3/22, 연합뉴스)

- 유엔 인권이사회는 21일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음.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은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음.
- 이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회(COI) 창설을 규정하고 있음. 유럽연



합(EU)과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한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했음.

- 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 조사위원은 마르쿠지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3명이 임명될 것이라고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가 전했다.
- 제네바 주재 대표부 최석영 대사는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사실조사위원회 창설을 포함하고 있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전의 결의안과는 달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버로 참석한 북한의 서세평 대사는 이 결의안이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반이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위원회는 올해 유엔 총회와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활동 결과를 각각 보고할 예정. 조사위 활동 기간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또 연장할 수 있음.

● <北 "유엔 인권결의는 정치협잡행위...전면 배격">(3/22,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협잡 행위"라면서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22일 밝혔다.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인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놀음에 중지부를 찍고 미국의 국가 주권 유린행위부터 문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난했음.
- 대변인은 "최근 우리와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연이어 참패를 당하고 궁지에 몰린 미국은 추종세력을 발동해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피우는 것으로 우리를 어찌 보려는 가소로운 짓을 한다"라며 "우리는 정치적 대결과 모략의 산물인 이번 인권결의를 전면 배격한다"고 강조. 이어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없애보려는 미국의 적대행위가 가증될수록 우리의 반미 전면대결전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일본-EU, 위기대응협정 체결 추진">(3/24, 연합뉴스)

- 일본과 유럽연합(EU)은 협상개시를 앞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병행해 군사협력을 포함한 위기대응협정 체결도 추진한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4일 브뤼셀발로 보도했음.
- 일본과 EU는 25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EPA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키프로스 금융위기로 헤르만 반 롬퓌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의 방일이 일단 연기된 상태임.
- 양측은 이번에 EPA와 함께 '정치협정' 협상도 병행하는데, 안전보장 분야에서 군사협력을 포함한 위기대응과 위기관리를 정치협정의 중점 협의 항목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정치협정은 미·일 안보조약과 같은 방위조약은 아니지만 인도 지원과 평화유지 등의 포괄적인 위기대응을 통해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